

시론

방화안전 선진화를 위한 제언

WTO체제 출범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와 개방화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세기말을 뒤로하고,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지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유형의 물적자원 보다 무형의 지적자원이 상대적 우위를 갖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제한 경쟁체제에서 정보화, 무한 경쟁체제로 급속히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나는 기존의 법,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세계적 보편주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여의치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건축물의 대규모화, 인텔리전트화와 함께 산업의 고도화로 공장시설의 첨단공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잠재위험 요인은 점차 증대되어가고 있지만, 시대의 환경 변화에 부응한 방재대책이나 안전의식의 결여로 화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화재통계를 분석해 보면,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1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6.3% 증가하는 대신 재산피해는 무려 연평균 26.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화재통계상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거공간인 주택 및 아파트화재(1999년)가 전체 화재의 29.3%에 이르고, 매년 10.1%씩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화재발생원인(1999년)을 보면, 전기화재가 연평균 33.1%로서 가장 많고, 담뱃불 12.6%, 방화 7.2% 순으로 세계에서 전기화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되어있다. 영국등 선진국의 화재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화재는 대부분 10% 또는 그이하인 반면, 방화 또는 방화형의 화재가 25 ~ 30%대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화재통계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및 피해상황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매우 높은 것으로서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21세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방화 안전의 선진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계몽활동과 방화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방화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커리큘럼에 화재예방 등 각종 생활안전에 대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LNTB(Learn Not To Bum)라는 어린이 학습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조기교육과 아울러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화재피해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류은열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

둘째, 최근 증가하는 주택화재 및 방화(放火)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거나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주택 등 주거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화재발생건수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명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택형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주거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주택방화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방화로 인한 화재가 선진국과 비교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화재원인조사 및 감식 등 선진 방재기술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위험(Moral Risk)의 증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소방기기 등 방화안전용품의 규격과 화재안전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관련제품 등의 품질향상을 기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WTO의 TBT(기술장벽협정)에 따라 개별국의 각종 규격과 인증제도 등은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새로운 재료, 공법 등의 성능기준에 의한 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제도를 적용함과 동시에 NFPA의 NFC(National Fire Code)의 공업, 공정별 기준 등 선진화된 각종 화재예방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 활용함으로써 위험관리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넷째, 화재보험제도의 예방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화재위험의 경감 및 방재시설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HPR(Highly Protected Risk)보험과 같이 건물 자체의 화재위험이 낮고 성능이 우수한 방재시설을 설치한 건물 및 공장에는 매우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영적인 측면에서 소유주가 스스로 방재시설을 설치, 개선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방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보험개발원이 정한 「소화설비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할인 적용하는 소화설비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소유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Fire Risk Index)를 산정하여 요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적용단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반면, 이 제도 역시 특수 건물에만 한정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향후 그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안전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화재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제도개선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개선 대책을 세워, 안전을 우리사회의 중심 가치로 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